

‘외고/자사고 폐지’ 임기 내 완료돼야

〈문재인 대통령〉

김승환 교육감 “폐지 전 단계로 교육부가 박탈했던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권부터 회복시켜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2일 새정부 교육공약인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와 관련 “현 대통령 임기내에 완료해야 한다”면서 “그 전 단계로 교육부가 사실상 박탈했던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정부는 자사고 재지정 요건을 대폭 낮춤으로써 시도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 일반계고와 거의 차이가 없었음에도 자사고로 재지정할 수밖에 없도록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2015년 3월 각 시도교육

청에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보내 자사고 재지정 요건 기준점수를 60점으로 낮췄다. 또 60점 미만의 탈락 점수를 받아도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뒤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자사고 지정·취소권을 무력화시켰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등 폐지는 새정부의 교육공약인 만큼 대통령 임기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그 전 단계로 교육부가 박탈했던 자사고 지정·취소권을 교육감 권한으로 완전하게 이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교 내신 절

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독자적으로 추진될 사안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와 동시에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도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새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취임 전이라도 만나 미리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특성하고·마이스터고의 해외 현장체험학습 대상국을 다변화할 것을 주무과에 지시했다. 현재 대상국가가 호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는데, 유럽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라는 것.

김 교육감은 “독일 등 유럽의 나라들은 사회복지가 잘 돼 있음에도 출산을 저하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엔지니어링 분야는 인력이 부족하다. 현지 영사관 관계자 등을 만나 들어보면 한국의 고교생들이 이 나라들에 진출하면 좋은 대우를 받고 취업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결국 장애물은 언어”라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혜은 기자

한국당 빠진 여야 3당 원내대표, 추경 심사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정국’을 이유로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했다.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김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이)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며 “그동안은 심사 자체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회, 김이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12일에도 불발됐다. 국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여야간사간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이라며 “우리는 부적격의견을 보고서에 담는 게 아니라 청문회 보고서 채택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모여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청문회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상황변화가 없다. 간사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당이 다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김이수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간사회동은 취소”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일자리 대책, 바로 시작하게 협력 부탁”

“빠른 효과 위해 공공부문 나서야 한다는 생각”

“실업대란 방지치 국가재난수준 경제위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대책을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며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라고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나가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제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 전북과학교육원 익산 유치 역할 커

최근 익산에 새로 문을 연 전북과학교육원이 다양한 전시 체험과 과학실습 등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중추적인 과학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북과학교육원은 지난달 30일 개원 이래 전북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타 지역의 학생과 교사들까지 전북과학교육원을 방문하는 등, 지난 주말에만 2,900여명의 아동·청소년 학생, 학부모가 전북과학교육원을 찾았다.

전북과학교육원이 익산에 신설·이전되기까지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배숙 의원은 “계획 수립후 12년만에 익산에 ‘전북과학교육원 개원’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익산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 만큼, 앞으로도 이 분들과 함께 전북의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북과학교육원이 배움과 체험의 공간이자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김종희 의원, 부안군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앞장

김종희 국회의원은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이 금년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부안군 담당 공직자의 열정과 부안군민의 애정어린 지원에 힘입어 선정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9,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서 그 공을 부안군 공직자와 부안군민에게 돌렸다.

또한 김 의원은 “부안군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평생교육에 힘을 쏟아서 부안군민이 행복을 누리고 청년과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남원시